

법규는 판단의 기준선이다



ISO는 방향을 말하고
법규는 기준선을 만든다

법규는 판단의 기준선이다

환경은 같아 보이지만
법규는 지역마다 다르다
각 국가는
자국의 환경 조건, 산업 구조, 사회적 합의를
법규로 고정한다
그래서 심사는 항상
'그 나라의 법규'에서 판단을 시작한다

ISO는 방향을 말하고

법규는 판단이 돌아오는 선을 만든다



국내 법규는 심사의 출발점이다

국제 표준은 동일하다

적용되는 법규는 다르다

심사는 항상 현장의 법규로 판단을 좁힌다

같은 ISO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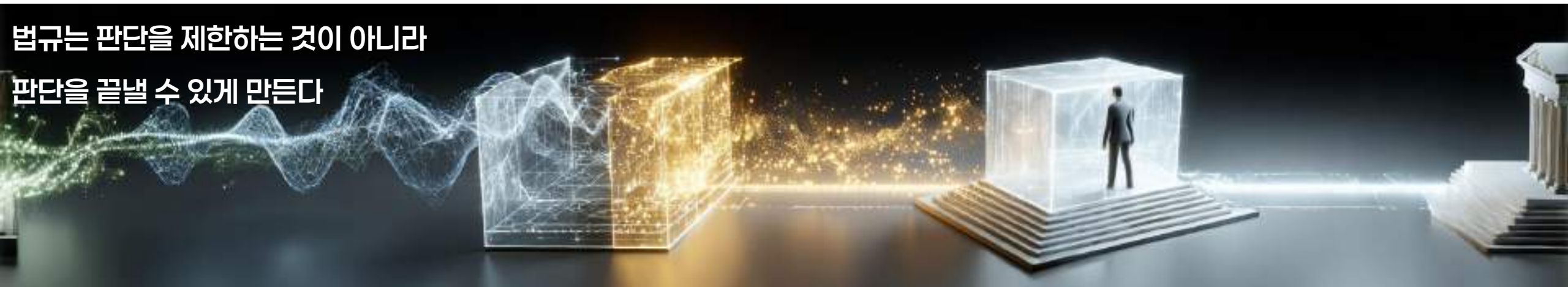
판단의 출발점은 나라별로 다르다



판단은 언제 법규로 돌아오는가?

- ◆ 판단은 항상 상황에서 시작한다
- ◆ 그러나 판단은 계속 확장될 수 없다
- ◆ 어느 순간
“여기까지 허용되는가?”를 묻게 된다
- ◆ 그 질문에 답하는 기준이 법규다

법규는 판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끝낼 수 있게 만든다



국내 환경법규는 이렇게 작동한다

- 환경법규는 의무를 정한다
- 의무는 수치와 구분으로 표현된다
- 심사는 이 수치와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규는 방향이 아니라
판단 가능한 기준을 만든다

환경법규는 ‘구분’으로 판단을 나눈다

구분이 없으면

- ◆ 기준이 한 덩어리로 뭉친다
- ◆ 판단이 흐려진다

구분이 있으면

- ◆ 규모가 갈린다
 - ◆ 의무가 갈린다
 - ◆ 관리 강도가 갈린다
- 환경법규는 ‘구분’을 만들어 판단을 나눈다

같은 환경이라도 구분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진다



환경법규가 판단을 만드는 방식

- ◆ 배출의 크기
- ◆ 시설의 종류
- ◆ 관리의 강도



구분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갈라놓는다

법규는 복잡해 보이지만
판단 방식은 단순하다



판단의 구분은 언제 호출되는가

현장 확인

→ 규모 파악

→ 해당 구분 호출

→ 적용 기준 결정

심사는

상황 → 구분 → 기준

순서로 움직인다



한국 환경법규는 이렇게 ‘구분’을 만든다

환경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나 법규는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진다

각 국가는

→ 자국의 환경 조건

→ 산업 구조

→ 사회적 합의 수준을

법규라는 ‘구분’으로 고정한다

그래서 한국 환경법규는

→ 사업장을 나누고

→ 규모를 나누고

→ 관리 강도를 나눈다

법규는 환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판단이 시작될 기준선을 만든다



구분은 결국 ‘판단 언어’를 호출한다

- 같은 활동이라도
- 같은 시설이라도
- 같은 환경이라도

구분이 달라지면

→ 심사에서 쓰는 말이 달라진다

법규는 답을 주지 않는다

어떤 언어로 판단할지를 정해준다



ISO 14001 심사의 사고 알고리즘

[심사원의 사고 흐름]

원인구조

1. 이것은 무엇인가?

→ **환경(Environment)**

2. 무엇이 원인인가?

→ **환경측면(Aспект)**

→ 도장 공정의 용제 사용

3.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 **환경영향(Impact)**

→ 대기질 변화, 주민 불편

4.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가?

→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

→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이해관계자 요구

5.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가?

→ **리스크와 기회(Risk & Opportunity)**

→ 민원 확산, 이미지 훼손 가능성

6. 실제로 통제되고 있는가?

→ **운영관리(Operational Control)**

→ 방지시설 관리, 절차, 교육

관리구조

환경 · 환경측면 · 환경영향 · 준수의무 · 리스크 및 기회 · 통제

이 여섯 개가 심사의 판단 언어를 완성한다.

스토리 텔링 예시, 한 공장에서 시작되는 판단의 흐름.

[상황] 도장 공정에서 냄새 민원 발생

환경, 사람을 포함한 주변 여건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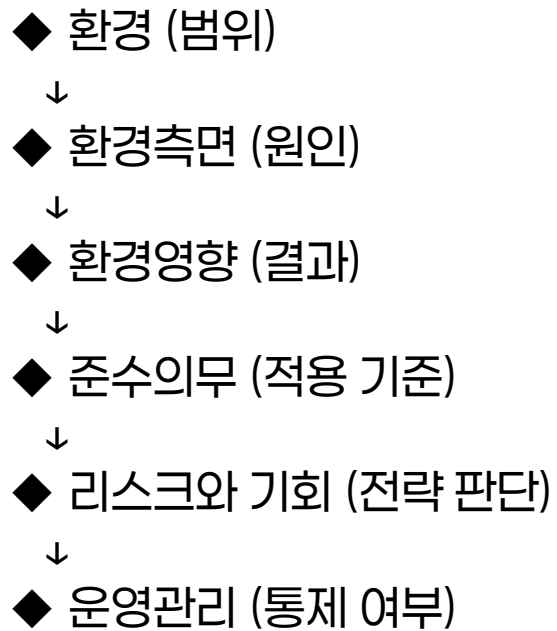
환경측면, 원인을 잡는다, 용제 사용과 배출 활동.

환경영향, 결과를 본다, 주민 불편과 대기질 변화.

준수의무, 법규와 약속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운영관리,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ISO 14001 핵심 판단 언어 6가지



심사는 조항을 읽는 일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언어를 호출하는 일이다

한국 환경법규에서 판단이 갈라지는 지점

① 관리 / 통제

- ◆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인가
- ◆ → 관리·통제 언어가 호출되는 지점

② 영향 / 결과

- ◆ 이미 환경에
영향이 발생했는가
- ◆ 결과가
외부로 드러났는가
- ◆ → 영향·결과 언어가 호출되는 지점

③ 지금 / 이후

- ◆ 판단 대상이
현재의 상태인가
- ◆ 아니면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까지 포함하는가
- ◆ → 시점에 따라 언어가 바뀌는 지점

같은 현장을 보더라도

어디까지를 판단 범위로 잡느냐에 따라

심사에서 쓰는 언어는 달라진다

환경법규는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판단이 갈라지는 '경계'를 만든다



한국 환경법규는 ‘사업장’을 먼저 나눈다

① 판단은 ‘환경’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시작된다

- ◆ 환경은 연속적이다
- ◆ 그러나 법규는 연속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법규는 판단을 위해 먼저 사업장을 구분한다

② 한국 환경법규는 다음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나눈다

- ◆ 배출 규모시설의 성격
- ◆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이 기준이 1종 ~ 5종 사업장으로 고정된다

③ 이 구분이 의미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관리 강도다

- ◆ 같은 공정이라도
- ◆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 ◆ 종별이 다르면 요구 수준이 달라진다

사업장 구분은 분류가 아니다

심사에서 적용할 언어를 미리 결정하는 장치다



사업장 구분 다음에 오는 판단 기준

① 사업장 구분은 끝이 아니다

- ◆ 사업장은 판단의 입구일 뿐
- ◆ 실제 심사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갈린다

② 한국 환경법규는 사업장 안에서 다시 묻는다

- ◆ 무엇을 배출하는가
- ◆ 얼마나 배출하는가
- ◆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③ 이 질문이 곧 '판단 언어'를 결정한다

- ◆ 관리 / 통제
 - ◆ 영향 / 결과
 - ◆ 지금 / 이후
- 같은 사업장이라도, 이 질문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사업장 구분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 판단 언어가 선택된다



같은 폐수처리 시설, 다른 판단- 실전 시뮬레이션

① 같은 폐수처리 시설이라도

- ◆ 동일한 방류구
- ◆ 동일한 처리 공정
- ◆ 동일한 방류수 수질

② 질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 배출이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 기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되고 있는가
- ◆ 이미 환경에 영향이 발생했는가

③ 이 질문이 곧 '판단 언어'를 결정한다

- ◆ 관리 / 통제
- ◆ 영향 / 결과
- ◆ 현재 / 잠재

→ 시설은 같아도, 심사 언어는 달라진다

질문이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심사의 결론을 결정한다



판단 언어는 '요구사항'으로 고정된다

① 판단 언어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 ◆ 관리 / 통제
 - ◆ 영향 / 결과
 - ◆ 지금 / 이후
- 이 언어들은 심사자의 표현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② 한국 환경법규는 이 언어를 '의무'로 변환한다

- ◆ 관리 / 통제 → 운영·관리 의무
 - ◆ 영향 / 결과 → 배출·영향 기준
 - ◆ 지금 / 이후 → 사전·사후 조치 의무
- 판단 언어는 법적 요구사항의 형태로 고정된다

③ 그래서 법규는 이렇게 작동한다

- ◆ 같은 상황이라도
 - ◆ 같은 사업장이라도
 - ◆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 어떤 판단 언어가 호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 조항이 달라진다

법규는 판단을 기록하지 않는다
판단의 결과를 '요구사항'으로 고정한다



요구사항은 ‘조항’이 아니라 ‘적용 범위’로 작동한다

① 요구사항은 하나가 아니다

- ◆ 같은 법이라도
- ◆ 같은 조항이라도
-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규는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묻는다

- ◆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 어느 수준까지 요구되는가
- ◆ 어디까지 관리 대상인가

③ 이 범위가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 ◆ 심사는 조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 ◆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법규는 조항을 나열하지 않는다
적용될 범위를 먼저 고정한다



심사의 판단은 이렇게 고정된다

① 심사는 해석을 만들지 않는다

- ◆ 심사는 법규를 “이해해 주는” 과정이 아니다
- ◆ 심사는 이미 정해진 요구사항이
→ 지금 이 상태에 적용되는지만 확인한다

② 판단은 구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 ◆ 사업장 구분
- ◆ 적용 범위
- ◆ 요구 수준
- ◆ 현재 상태
→ 이 네 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 심사의 판단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③ 그래서 심사의 판단은 ‘선택’이 아니라 ‘확정’이다

- ◆ 잘했다 / 못했다 ✖
- ◆ 노력했다 / 의도가 있었다 ✖
→ 심사는 다음 하나만 본다
요구사항이 이 사업장의 이 적용 범위에서
현재 상태에 맞게 충족되고 있는가 / 아닌가
→ 이 질문이 심사의 판단을 고정시킨다

심사의 판단은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 이미 결정된 지점이다



심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① 심사는 '의도'를 먼저 보지 않는다

심사는

◆ 조직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심사자는

◆ “왜 이렇게 했는가?”보다

◆ “지금 무엇이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본다

→ 판단은 의도가 아니라 상태에서 시작된다

② 심사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고정된 흔적'이다

◆ 문서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 말이 맞는가 틀린가가 아니라

심사는 다음을 본다

◆ 이미 정해져 있는 관리 방식

◆ 이미 적용되고 있는 요구 수준

◆ 이미 작동 중인 통제 구조

→ 심사는 설명보다 구조를 본다

③ 그래서 심사는 이 질문으로 수렴한다

이 사업장은

◆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그 요구사항은

◆ 현재 상태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 그 범위가 법규 기준과 일치하는가

→ 심사는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 “맞는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심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

심사는 적용된 기준을 확인한다



심사는 어디에서 '적합 / 부적합'을 나누는가

① 심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지 않는다

- ◆ 심사는
전체 시스템을 평가하지 않는다
- ◆ 심사는
적용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 범위 밖의 것은
- 잘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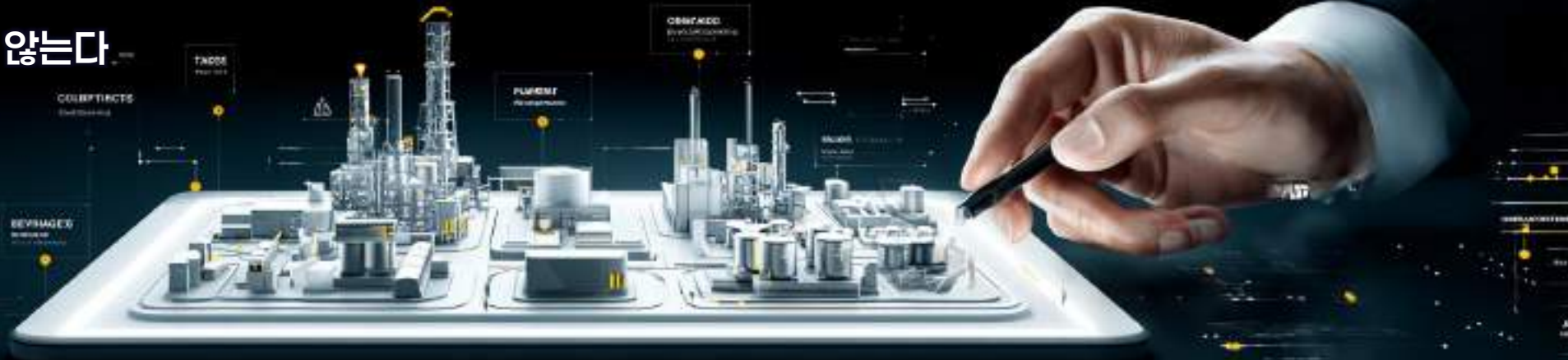
② 판단은 항상 '요구사항 × 상태'에서 갈린다

- ◆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 ◆ 그 요구사항이
지금 상태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 벗어났는가
- 심사의 판단은
-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갈린다

③ 이 지점에서 적합과 부적합이 갈린다

- ◆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인가
그 범위 안에서
- ◆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 ◆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여기서 심사는
- '적합 / 부적합'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심사는 잘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장 시나리오 ① : 애매해 보이지만 ‘적합’인 경우

① 상황

- 배출시설은 노후되어 보인다
 - 설비 주변이 정돈되지 않아 보인다
 - 담당자는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
- 외형만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 상황

② 심사가 실제로 보는 지점

- 해당 사업장은
 - 적용 대상 요구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 그 요구사항에 대해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 현재 상태가 기준 안에 있음이 확인됨
- 설명·인상·의도는 판단 요소가 아님

③ 판단 결과

- 요구사항은 적용 범위 안에서
 - 현재 상태에 맞게 유지되고 있음
- **판정: 적합**

심사는 ‘잘해 보이는지’를 보지 않는다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다



현장 시나리오 ② : 잘 관리돼 보이지만 ‘부적합’인 경우

① 상황

- 설비는 최신으로 보인다
 - 현장은 정돈되어 있고 외관 상태도 양호하다
 - 담당자는 설명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다
- 외형상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

② 심사가 실제로 보는 지점

- 해당 사업장은
 - 적용 대상 요구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나
 - 그 요구사항이 적용 범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공정 / 일부 시간대가 관리·통제 구조 밖에 존재함
- 설명·의도·관리 의지는 판단 요소 아님
- 적용 범위 누락 = 구조적 이탈

③ 판단 결과

-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범위 전체에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상태가 기준선 밖에 존재함

→ **판정: 부적합**

심사는 ‘잘 관리해 보이는지’를 보지 않는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본다



부적합은 '잘못'이 아니라 '이탈의 크기'다

① 심사는 '틀렸다 / 맞다'를 말하지 않는다

- ◆ 심사는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 ◆ 심사는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본다

② 그래서 부적합은 '종류'로 나뉜다

- ◆ 경미 부적합
 - 기준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탈
 - 관리 구조는 유지되고 있음
- ◆ 중대 부적합
 -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 관리·통제 구조 자체가 작동하지 않음

③ 이 구분은 처벌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 ◆ 개선 요구의 수준이 달라지고
- ◆ 시정 기간과 방식이 달라진다

부적합은 결과가 아니라
조치의 강도를 결정하는 언어다



ISO 심사의 '부적합'은 한국 환경법규의 '위반 판단'과 연결된다

① ISO 심사는 상태를 판단한다

- ◆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 ◆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본다

② 한국 환경법규는 그 상태를 '법적 결과'로 고정한다

- ◆ 관리가 안 되는 상태
- ◆ 기준을 초과한 상태
- ◆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
- 이 상태는
- 행정처분 / 개선명령 / 과태료 / 처벌로 이어진다

③ 그래서 두 판단은 다른 언어지만, 같은 지점을 본다

- ◆ ISO: 적합 / 부적합
- ◆ 법규: 위반 여부 / 행정 조치 대상

심사는 상태를 분류하고
법규는 그 상태에 결과를 붙인다



심사의 판단은 여기서 멈춘다

① ISO는 방향을 정했다

- ◆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 ◆ “무엇을 보라”는 기준을 제공했다

② 법규는 기준선을 만들었다

- ◆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고정했다
- ◆ 판단이 확장되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었다

③ 심사는 그 선을 넘었는지만 본다

- ◆ 설명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 ◆ 의도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 ◆ 개선 노력도 판단 대상이 아니다
- 이미 정해진 기준 안에 있는가 / 벗어났는가
- 그래서 심사의 결론은 항상 하나로 수렴된다
- 적합
- 부적합

심사는 판단을 완성하지 않는다

이미 완성된 판단 구조를 확인할 뿐이다



본 교육 콘텐츠는 ISO 14001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심사 구조와 판정 기준은 실제 심사 관점에서 정렬되었으며,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도구는 전문가가 설계한 사고 체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콘텐츠에 담긴 모든 판단의 준거와 논리적 책임은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근거합니다.

국제AI교육원은 기술적 수단보다 기준 중심의 사고 훈련(Standard-Based Thinking)을
지향하며,

교육생의 실질적인 심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